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 HUMAN RIGHTS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김국신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전현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CONTENTS

제5권 2호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1년 1월
발 행 2011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618
(팩스) 901-254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12
- 3. NGO 15
- 4. 분석 및 평가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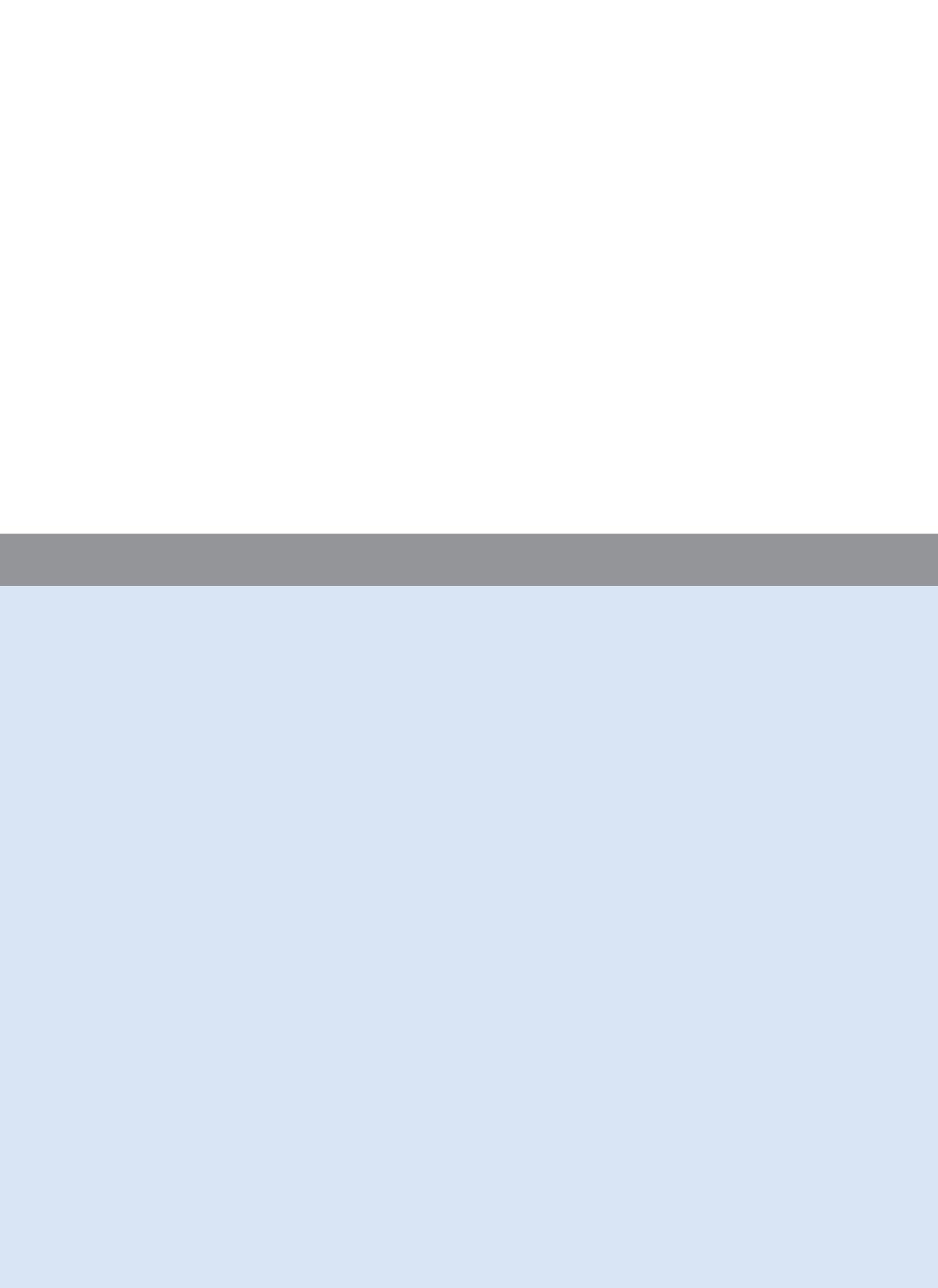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25
- 2. 일본에 대한 반응 27
- 3. 유엔에 대한 반응 29
- 4. 남한에 대한 반응 30
- 5. 분석 및 평가 33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37
- 2. 납북자 56
- 3. 국군포로 60
- 4. 이산가족 61
- 5. 분석 및 평가 66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12
3. NGO	15
4. 분석 및 평가	19

1. 개별국가

가. 미국

국무부, 북한 억류 미국인 고프즈 석방 촉구(7.10)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Aijalon Mahli Gomes)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석방 요구
 - 한국에서 대북인권활동과 영어교사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고프즈는 2010년 1월 25일 북한에 무단입국한 뒤 체포돼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을 선고 받음.

미국의 소리방송, 북한 억류 고프즈 단식농성 보도(7.31)

- 데이비드 하웰 영국 외무차관이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7.28)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고프즈가 자살 시도에 이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방송이 보도

국무부, 고프즈 석방을 위해 북한과 대화 진행(8.23)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고프즈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고프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8월 9~11일 북한 방문단 파견

국무부, '북한여행 경고' 발령(8.26)

- 미 국무부는 자국민에 대해 북한여행 경고(Travel Warning)를 발령하고 북한여행을 가급적 피하거나 불가피한 여행 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것을 당부
 - 북한여행에 대한 경고 조치는 이번이 처음

카터 전 대통령, 석방된 고프즈 동행 귀환(8.27)

- 북한에 수감돼 있던 고프즈와 그의 석방을 위해 평양에 갔던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미국 보스턴 공항을 통해 귀환

미국의 소리방송, 미국 정부 북한에 의약품 지원(9.2)

- 미국 정부가 북한에 홍수 구호품을 제공할 예정인 민간단체들에 의약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7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

북한인권특사, 북한인권문제와 미·북관계 언급(9.8)

- 로버트 킹(Robert King)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미국 정부의 한결같은 우려 사항”이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미·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힘.
 - 킹 특사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워싱턴 DC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

NED, 북한 시장 연구에 16억 지원(9.15)

-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 북한의 장마당 연구를 지원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이 보도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NED는 8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의 장마당 연구를 위해 국제민영기업연구소(CIPE: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에 약 8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 총 145만5천 달러의 2010 회계연도 대북 예산 집행안을 통과시킴.

미 의회, 1년 반 만에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9.23)

- 미 의회는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하여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 청취
 - 2009년 4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북한인권주간 당시 개최된 이후 1년 반 만에 청문회 개최

오바마 대통령, 인권억압 국가로 북한 지목(9.25)

-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

북한인권특사, 유엔 인권보고관 방북 허용 촉구(10.22)

- 킹 북한인권특사는 뉴욕에서 마르주키 다르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열악하다면서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촉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북한의 인권기준 비판(10.25)

-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실은 북한이 자신들의 주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비판

국무부, 북한의 종교자유 비판(11.17)

- 미 국무부는 지난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 Country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되어온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
 - 국무부는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당국의 종교의 자유 존중도는 과거와 비교해 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 당국은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표현할 자유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힘.

하원 외교위원장, 중국의 대북지원 보류 촉구(11.23)

-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하여 “중국은 도발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 북한인권 개선 촉구(12.10)

-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가진 특별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악”이라면서 “감옥에서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족하다”며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나. 유럽연합 및 기타국가

■ 유럽연합

유럽의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7.8)

- 유럽의회가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당국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살인과 임의구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능 불인정 및 방북불허 등 유엔인권메커니즘에의 협력 거부를 비난
 -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최소한 6곳에 수용소를 설치해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개처형 중단 및 사형제도 폐지 촉구

■ 중국

무상원조 연간 3~4억 달러 추정(10.5)

-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무상원조 지원국으로, 중국이 한해 북한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규모가 3~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자료에 따르면 북·중 간 교역액이 2006년 16.99억, 2007년 19.76억, 2008년 27.92억, 2009년 26.80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

■ 영국

북한인권전문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투 트랙 접근법’ 제안(12.8)

- 벨기에 브뤼셀 유럽회의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서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베네딕트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가혹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인적교류 등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투 트랙(Two track) 접근법’ 제안

■ 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북한의 복지수준 비판(9.15)

- 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Shirin Ebadi) 박사는 “북한 통치자는 정치적 지위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 복지수준은 한국인의 삶과 비교

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 식재료 부족과 위생상태 불량에 처해 있다”면서 “수백만 달러가 핵 개발에 사용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고 발언
 - 에바디 박사는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수립’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다. 한국

통일부, 인도적 대북물자 반출 승인

-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반출 승인
 - 함경북도 온성군과 황해도 사리원시에 영·유아, 장애인 지원을 위한 두유와 제빵원료 반출 등 2건 승인(7.2)
 - 남북나눔이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영·유아에게 보낼 밀가루와 한국제이티에스가 북한 9개 시·도의 영·유아와 장애인에게 지원할 밀가루 반출 등 2건 승인(7.9)

인천시, 대북 인도지원 사업 재개를 위한 활동 전개

- 인천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된 대북교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업무협약을 맺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함경북도 온성군의 24개 유치원 어린이 1,500명에게 빵과 두유 등의 지원 합의(7.27)
 - 남북평화재단과 북한 평양산원 영·유아와 산모에게 우유, 분유, 겨울의류를 지원하는 대북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8.12)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제이티에스 등 대북지원단체 6곳과 북한의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10.1)

통일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방북 불허(8.2)

- 통일부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방북목적,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5·24 대북제재조치가 유효한 현재 시점에서 북한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평양 방문을 불허

통일부, 천안함 이후 대북지원 단체 첫 방북 승인(8.13)

- 통일부는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이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신청한 의료진 1명과 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3명의 방북을 승인

한국 성인 80% 북한인권 개선 필요 공감(8.17)

- 한국 성인들은 통일을 위해 군사적 긴장해소, 인권 개선 등 북한의 선(先)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통일을 위한 우선과제로 △군사적 긴장해소(83.6%) △북한인권 개선(82.8%) △북한의 개혁·개방(78.2%)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75.7%) 등을 꼽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갤럽과 함께 2010년 7월 전국 16개 시·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른 것임.

여·야, 대북 쌀지원 문제 두고 입장 대립

- 농촌출신 의원모임인 ‘국회농어업회생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쌀과 보건의료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9.6)
 -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현희 대변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9.7)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전쟁 비축미 100만 톤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후 “수해 등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지만, 좌파 정권 10년간 남북관계가 다수 국민정서에 반하는 분위기로 형성됐으며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있었다”고 지적(9.16)
 - 국가정보원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밝힘(9.28).

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신중한 입장

-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
 - 현인택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쌀, 시멘트, 중장비 지원요청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이나”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변(9.8)

- 경상남도가 북한 수해민을 돕겠다며 대북지원 사업자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쌀 602톤의 대북 반출을 시도했으나 통일부가 반출 승인 보류(10.15)

통일부·대한적십자사, 대북 수해물자 지원 및 수해복구 지원 승인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제공 요청과 관련해 쌀 5,000톤과 시멘트 1만 톤을 비롯해 100억 원 규모의 물품을 보내기로 결정(9.14)
 -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에 남북협력기금 86억 원 지원(9.29)
 -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수해지원물자인 컵라면과 쌀 5천 톤 중 일부가 북한 신의주 지역에 전달(10.29, 11.9)
- 통일부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의 쌀 203톤 등 5개 단체가 신청한 8건의 대북 수해복구 지원물자 반출 승인(9.15)

여·야, 북한인권법 제정 엇갈린 주장

-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은재 의원은 임명장을 받은 직후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만큼 당사자인 우리나라 역시 하루속히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9.15)
 -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당내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인권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상징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11.2)
-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일찍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북한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것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었고 내용면에서도 주요한 사항은 모두 빠진 채 형식상으로만 북한인권법일 뿐”이라며 아쉬움 토로(7.28)
-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11.1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입장 표명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본적도 없고 논의도 없었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기존의 입장과 똑같다”고 발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의 종교활동 실태 파악(11.10)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발간한 「2010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종교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여전히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 피력(11.15)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201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9개월 동안 국회 법사위에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부처에서 다 합의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빨리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변

통일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대북 수해지원 유보(11.24)

-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을 잠정적으로 유보
 - 대북 전달을 위해 중국 단둥에 대기 중인 3,700톤의 시멘트와 5억8,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전달도 중단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반인도적 행위로 비판(11.25)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반인도적,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
 - 인권위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 정신을 위반한 행위”라며 북한에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장기 교착상태(11.25)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교착상태에 봉착
 - 인도적 대북 쌀지원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통일쌀 2차분을 북한 현지에 전달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승인 요청을 하려 했으나 연기
 -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12월 5~10일 북한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100톤의 밀가루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전면 보류

- 인천시는 8억여 원을 들여 등대지기 등 대북지원단체를 통해 추진해 온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전면 중단
- 전라북도도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를 통해 연말까지 8억 원 상당의 쌀·보리쌀·라면 등의 구호품을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보내기로 했지만 취소

한나라당,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인권법의 필요성 다시 제기(12.1)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민주당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도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12.6)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대해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선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지원하라고 권고
 -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찬성 6표, 반대 2표로 권고안 가결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무산(12.10)

- 북한인권법안이 2010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함.
 - 북한인권법안은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 10개월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
 -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직권상정 할 성격의 법안이 아니다”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발표(12.13)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 계획을 시기별(단기·중기·장기), 행위자별(다자·양자·국제기구), 이슈별(북한 주민·탈북자·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로 나눠 제시했다”고 설명
 - 국가기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로드맵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명박 대통령, 북한 주민 인권에 관심 표명(12.29)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
 -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지구상에 어떠한 사람도 국민의 기본권, 최소한의 행복권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에 대한 관심 표명

2. 유엔과 국제협력

2010년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급감(7.1)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10년 1~6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현금과 물품은 작년 전체 지원액(5천900만 달러)의 19.8%인 총 1천166만7천890달러에 해당

세계식량계획, 스웨덴 기부로 대북 식량지원(7.7)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스웨덴 정부가 기부한 미화 278만2000달러 전액을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사용키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국제형사재판소, 김정일 고발장 접수(7.13)

-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한국의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쟁범죄 혐의로 김 위원장을 2010년 6월 8일 ICC에 고발

유엔, 2010년 하반기 북한에 500만 달러 구호기금 지원(7.20)

- 유엔이 2010년 하반기 북한에 미화 500만 달러의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7월 16일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엔 기구의 대북사업을 돕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북 식량지원 취소(8.4)

- 시어도어 프리드리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n the United Nations) 곡물 생산체계강화 담당관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줄어 북한에 대한 식량안보사업이 취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유엔,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 지속 지적(10.20)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
 - 보고서는 “광범위한 식량부족과 의료보건 체계 붕괴, 안전한 식수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같은 만성적인 문제들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

유엔, 북한의 만성적 식량위기 우려 표명(10.22)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소 350만 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이 식량부족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
 - 반 총장은 특히 “세계 경제위기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 유엔은 2010년 북한의 곡물수확량이 2009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

WFP 사무총장,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수준 우려(10.28)

- 조셋 시런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북한의 전체 영·유아 가운데 250만 명이 WFP의 지원대상”이라고 밝힘.
 - 시런 총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실조가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북한 특정 지역에서는 35~40%에 달하는 아이들이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발언

WFP·FAO,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예고(11.17)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교적 괜찮은 추수와 약간의 식량배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약 5백만 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WFP·FAO 공동 식량 안보조사단은 북한이 2010년과 2011년 86만7천 톤의 곡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 당국은 32만5천 톤의 곡물만 수입할 계획이어서 54만2천 톤의 곡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보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11.18)

- 제6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으로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
 - 결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특히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 추가
 - 우리 정부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동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 시 찬성 투표

※ 제65차 북한인권결의안은 부록 참조

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12.6)

- 국제형사재판소(ICC)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는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해 3월 26일의 천안함 침몰 사건이 ICC의 관할 대상인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

2010년 국제사회 대북지원 감소(12.28)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0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060만 달러로, 작년 5,875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유엔 인도지원업무조정국(OCHA)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

3. NGO

가. 국내 NGO

한기총 대표회장,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7.19)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은 한기총을 방문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회가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과 더불어 중국 내 유기된 북한 어린이 3,000여 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

대북인권단체, 대북전단 10만장 임진각에서 살포(7.27)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인권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전단 10만여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냄.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8.12)

- (사)북한인권시민연합 회원 10여 명은 종로에서 시민들에게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과 풍선을 나눠주며 탈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림.

한국기독교장로회,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지원 사업 허가 촉구(8.12)

-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면 허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함께나누는세상, 북한 어린이들에게 우유보내기 행사 개최(8.13, 10.22)

- 대북지원단체인 함께나누는세상은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및 평화민들레와 공동으로 '북한우유보내기 희망 출항식' 행사 개최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8.19~22)

-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은 캐나다 NGO인 한보이스(Han Voice)와 공동으로 북한인권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제10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대북 쌀지원 재개 촉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쌀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 연이어 개최
 -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출정식을 열고 대북 쌀지원 재개, 한반도 평화실현 등을 결의하고(8.5),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정부에 쌀 대북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9.6, 11.10)
 - 통일쌀 보내기 전북도민운동본부(8.9) 및 충북도민운동본부 결성(10.18)
 -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쌀 203톤을 보내고(9.17), 전남운동본부는 ‘전남 통일쌀 보내기 운동 선포식’을 가졌으며(10.7), 경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촉구(10.11)
 - 부산지역 각계 대표로 구성된 ‘대북 쌀지원 추진 부산운동본부’ 결성(9.17)
 - 평화대사협의회는 ‘평화의 쌀 모으기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대북 쌀지원을 촉구하고(10.11), 평화대사 대구·경북협의회는 대북 쌀지원을 위한 ‘평화의 쌀 모으기 국민운동본부’ 결성(10.20)
 -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경남도당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쌀 보내기 경남운동본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범도민 쌀 보내기 운동에 동참(10.20)

한기총·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9.10)

- 한기총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137개 단체는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

한국노총 등, 수해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수해지원 물자 전달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모은 쌀 100여 톤이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 후 서해상 육로를 거쳐 개성에서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민족화해협의회에게 전달(9.30)

- 금강산에 골프장을 건설한 에머슨퍼시픽그룹과 (사)평화3000은 수해지원용 밀가루 100톤을 동해선을 통해 북한에 전달(10.21)
- 경남도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통일쌀 50톤이 2010년 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의 개성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출발(11.17)

북한민주화네트워크·세종연구소, 2010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10.21)

-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세종연구소는 NED와 공동으로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증진 전략’을 주제로 2010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북한 내 정보유통의 실태, 북한시장화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과 민주화 전략 등의 내용 논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촉구 서한(11.12)

-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북한을 제외한 190개 대표국에 촉구 서한 발송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 연평도 포격 도발로 중단

- 한기총은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폭격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보내기 성금 모금 운동 중단을 선언(11.25)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12월 6일 예정됐던 대북지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취소(12.1)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ICC의 북한 도발 조사활동 지원 촉구(12.8)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 예비조사 착수는 ICC가 김정일, 김정은의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ICC의 조사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

나. 외국/국제 NGO

수전 솔티, 북한의 변화 촉구(7.22)

- 수전 솔티(Suzanne Schilte) 디펜스포럼 대표가 “현재 북한에서 매우 극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외부의 힘을 더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
 - 솔티 대표는 20일 북한인권 개선에 헌신한 공로로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미국 학기금(TFAS: The Fund for American Studies)이 수여하는 월터 저드 자유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

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의 대북지원 분배 모니터링 봉쇄 보도(8.24)

- 미국 민간단체 관계자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의 분배 감시를 위해 이달 초 방북했지만, 남북관계의 개선 이전에는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현장에 접근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국제의원연맹,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8.25)

-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속한 방북과 북한 내 인권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실효성 있는 활동 보장을 북한 정부에 촉구
 -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 경유국가들의 탈북자에 대한 안전제공 요구,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 각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사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 2010년 G20정상회의 이전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

국경없는 기자회, 북한을 언론탄압국가로 지목(10.19)

- 국제적인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중국·시리아 등과 함께 ‘세계 10대 언론탄압국가로 지목
 - 10대 언론탄압국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시리아·르완다·미얀마·이란·예멘·수단·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

로버트 박, 북한에서의 고문사건 공개(10.26)

- 로버트 박은 KBS 9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 생활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모욕적인 성고문을 당했다”며 고문사건의 내막을 공개
 - 그는 인터뷰에서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체포돼, 여기저기로 끌려 다니며 구타와 폭력에 시달렸다”며 “폭력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여성들로부터 모욕적인 성고문을 당해 극도의 수치심이 들었다”고 말함.

4. 분석 및 평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평가 및 외교적 압박 지속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북한을 지목
 - 미 국무부는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됨.
 - 미 의회는 1년 반 만에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및 공보담당 차관보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고 특히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거듭 촉구

한국,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불투명

- 2010년 2월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았음.
-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으나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12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였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및 대응 강화

- 민간단체들은 인권유린 및 주민학대 중단 촉구,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촉구 서한 발송 등의 행사를 통해 북한인권문제 제기 지속
 - 국민들의 80%가 북한 변화 및 통일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지적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확산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채택하고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발표
-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고 인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 및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어 통일대비와 관련하여 주목됨.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대북 인도지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많은 영향

-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비롯된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과 수해물자 지원, 쌀지원 재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많았음.
- 통일부도 5·24 대북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물품 반출을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대북 수해물자를 지원하였음.
-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면 중단됨.
 - 통일부는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수해지원을 유보하고 지원물자를 회수
 -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도 교착상태에 봉착
 - 민간단체들도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

유엔, 북한인권문제 지속적 제기 및 이산가족문제 언급

- 유엔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결의 채택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외무성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국제인권규범 및 협약의 준수 촉구
 - 유엔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지난 1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

- 특히 2010년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는 기존 북한인권결의에는 없던 남북 이산 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

국제기구, 대북 식량지원 감소 및 북한 식량부족 경고

- 세계식량기구(WFP)가 스웨덴 기부로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하였고 유엔이 2010년 하반기에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하였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안보 사업 취소
 - 2010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009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북한의 식량부족을 우려하는 국제기구의 우려가 잇따름.
 - 유엔은 홍수와 가뭄,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으로 2010년 북한 곡물수확량이 2009년에 비해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WFP 사무총장은 북한 아동 250만 명이 영양실조라며 우려
 - WFP·FAO 공동보고서는 북한이 향후 1년 동안 54만2천 톤의 곡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

북한 정권 및 지도자에 대한 형사처리문제 새로운 차원에 진입

- 북한 정권 및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여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이 문제가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접어들었음.
 -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북한 정권 및 김정일을 처벌하기 위한 공식적 수순에 진입
 - 그 동안은 주로 반인도범죄를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고 ICC도 전쟁범죄 측면에서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



북한의 대응



II

1. 미국에 대한 반응 25
2. 일본에 대한 반응 27
3. 유엔에 대한 반응 29
4. 남한에 대한 반응 30
5. 분석 및 평가 33

1. 미국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비난(7.5)

-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모독, 내정간섭과 압력책동의 도수를 높이려는 침략적기도의 발로”라고 논평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해외 비밀감옥 운영 비난(8.18)

- 미국이 루마니아·폴란드 등 해외에서 비밀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건 공개 관련 “인권옹호에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비밀감옥에서 감행된 인권유린범죄에 대해 국제 사회에 공개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평양방송, ‘북한의 여름철 전염병 확산’ 보도 부인(8.23)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북한에서 여름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발병위험이 나타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미국인 곰즈 석방조치는 인도주의 정책의 발현(8.27)

-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8.25~27)하여, 억류되어 있던 곰즈씨를 데리고 귀환 - 불법입국 미국인에 대한 석방조치는 북한의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적 정책의 발현”이라고 주장

중앙방송, 미국의 의료보험·총기·마약·실업 등 사회문제 비판

-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망사고 사건을 거론하며 “자본주의는 인간의 생명도 돈에 좌지우지되는 인간생지옥”이라고 비난(9.24)
- 미국 사회의 총격사건 증가추세와 마약 성행 및 실업 등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자본주의의 반인민성, 취약성”이라고 주장(10.6)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이라크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비난

- 미군의 이라크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폭로한 최근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운운하지 말라”고 비난(10.5)
-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이라크주둔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감자를 고문했다는 비밀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도(11.9)
 - “인권옹호자 행세를 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이중적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1940년대 미국 과학자들의 전염성병원균 감염실험 규탄(10.25)

- 최근 미국 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1940년대 미국 과학자들이 과테말라에서 감옥과 정신병원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전염성병원균’에 대한 감염실험을 감행했다고 보도
 - 이러한 인권유린 범죄행위는 “인권옹호 타령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로동신문, 미국의 인권정책을 내정간섭을 위한 모략책동으로 비난(11.13)

- 미국의 인권정책을 제국주의자들의 “타국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략책동”으로 비난

로동신문,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판받았다고 보도(11.19)

- 유엔 인권이사회(11.5)에서 이란·러시아·중국 대표들이 ‘관타나모’ 미군기지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주도한 반테러전에서의 인권침해 사태를 지적했다고 전하며 미국의 “세계 인권재판관행세”를 비난

민주조선, 미국은 ‘인권유린의 왕초’ 라고 비난(11.29)

- 국제사면위원회(AI)의 ‘미국 인권보고서’ 관련, “미국은 인권옹호자의 탈을 벗어버리고 인류에 저지른 온갖 인권유린범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로동신문, 미국의 ‘2010년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 비난(12.6)

- 미국이 ‘국제종교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2010년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중국·이란 등 8개 나라를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비난
 - 미국의 종교문제와 관련한 연례보고서는 “그 부당성과 내정간섭적 성격으로 하여 세계적인 항의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

2. 일본에 대한 반응

민주조선, 일본의 한일합병조약 사과 담화 내용 비판(8.31)

- 일본의 한일합병조약 사과 담화 관련, “조선인 강제연행과 위안부범죄를 언급하지 않은 유치한 기만극”이라며 북한에 “사죄하고 배상할 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

로동신문, 일제의 간포 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 만행 규탄 및 과거청산 촉구

- ‘간포 대지진’ (1923.9.1) 당시 일제는 ‘조선인 폭동설’을 날조하여 재일조선인 대학살 만행을 저지르게 하였다고 지적하며 사죄와 배상 촉구(9.1)
 - 간포 대지진 참변은 “철두철미하게 일제에 의하여 감행된 인공적 재난”이었다고 규탄
- 최근 일본에서 양심적인 시민들이 ‘간포 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를 결성하여 “일본 정부로 하여금 조선인학살만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필요한 배상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10.18)

로동신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대표의 납치문제 발언 비판(10.6)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대표가 ‘납치문제의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딛 데로 돌려보려는 잔꾀”라고 평가

평양방송, 일제의 강제연행·위안부문제에 대한 배상 촉구(10.20)

- 일본 수상의 ‘한일합병 100년 담화’ 관련 “일제의 죄행을 악화시키고 청산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오그랑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강제연행·위안부문제 등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

조선중앙통신,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민족적 차별이라고 규탄

- 일본 법무상과 납치문제담당관이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무료화제도’ 적용문제에 반대한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며 비인도적행위”라고 논평하며 시정 촉구(10.26)
 - 일본 보수세력은 조선학교들을 ‘사상위주의 학교’, ‘대일공작기관’ 등의 딱지를 붙이면서 고등학교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
- 재일동포단체들은 11월 25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을 미루려는 일본 정부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12.3)
 - 성명서는 “일본내각 관방장관, 문부과학상이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학교에 지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수속을 정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11.24)하였다고 비난

로동신문,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도덕적 의무라고 주장(11.9)

- 제6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평양방송·로동신문, 일제의 위안부·강제징용 등 전쟁범죄 사죄 및 배상 촉구

- 일제의 ‘위안부 범죄의 악랄성’ 을 상세히 폭로하며 일본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면 모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죄 및 배상” 촉구(평양방송, 11.12)
- 타민족여성들을 강제연행하여 집단적으로 전쟁터에 성노예로 끌고 다니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고 주장(로동신문, 11.21)
 - 군국주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중단하고 새 출발할 것을 요구

- “일제의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위안부 등 인권유린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과거청산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로동신문, 12.22)

로동신문·평양방송, 일본 정부의 핵·납치문제 우선적 해결 주장 비난

- 일본 당국은 ‘핵문제’, ‘납치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거청산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고 비난(로동신문, 11.17)
 -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일본 당국이 과거청산을 하루빨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 일본 정부의 “핵문제와 납치문제 선행” 입장을 비난하고 “위안부, 강제연행 등 과거 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의무 이행” 촉구(평양방송, 12.17)

조선중앙통신, 인권 논의는 과거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논평(11.30)

- 유엔주재 일본 대표의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대해 “인권을 논함에 있어 일본의 과거청산부터 시급히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독일과 다른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판이한 태도 비난(12.6)

-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시 감행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단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제의 침략죄행에 대하여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일본 극우세력은 오히려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왜곡, 정당화하며 군국주의를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

3. 유엔에 대한 반응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는 정치적 음모”(10.22)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북한에 대한 비난은 북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라며 북한인권 관련 유엔 보고서를 비판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물·위생·보건의 향유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

조선중앙통신,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논의는 백해무익한 인권중상이라고 반발(11.2)

-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북한인권문제 거론 관련, 북한의 “내정에 함부로 칼질하려는 것은 자주적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라고 반발

북한 외무성,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전면 배격” 성명 발표(11.20)

-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시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힘.

로동신문, “유엔의 민주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주장(12.10)

-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절대다수 회원국들의 의사와 이익이 존중되도록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숫자를 확대하고,
 - 유엔 총회의 권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

4. 남한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불법 방북한 한상렬 목사 사법처리 중단 요구(8.24)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 방북(6.12~8.20)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
 - 한상렬 목사는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조선중앙통신, 나포한 남측 어선 ‘대승호’ 송환 결정(9.6)

- 북한은 8월 8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대승호(남측 4명, 중국인 3명 승선)를 동포애적·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송환 보도 이후 9월 7일 속초항으로 귀환

평양방송, 친북사이트 ‘트위터’ 계정 차단 비난(9.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체제선전에 이용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접속을 차단한 것과 관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인터넷상 반정부 투쟁 선동

조선중앙통신, 대북 심리전방송 및 빼라살포 중단 요구(10.15)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대북 ‘심리전방송’ 및 ‘빼라살포행위’에 항의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 발송
 - ‘방송수단과 살포지점들에 대한 물리적 타격’ 위협

평양방송·조선중앙통신,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대결선언, 남북 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평양방송, 10.18)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인권을 구실로 반공화국(반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반발(조선중앙통신, 12.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비난(11.24)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동족 대결에 정신 나간 자들의 가소로운 행위”라고 비난
 -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및 지지표시 관련,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강요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동족과 대결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조선중앙통신, 11.30)

로동신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권 모략소동”(12.13)

- 정부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인권 모략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망상을 실현”하려고 있다고 비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무단 방북’ 한상렬 중형 구형 비난(12.25)

-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에게 보안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 끝끝내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고 비난

평양방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시상자 시비(12.26)

-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인권상’ 시상자들은 ‘반북 인권소동에 앞장선 인물’들이라며 이는 “반북 모략책동과 동족대결을 변함없이 추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시비

로동신문, ‘인권 모략소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12.31)

- 남한의 “인권 모략소동이 지금처럼 엄중한 단계에 이른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는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조차하지 않는다”고 변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북 “인권모략소동을 전문으로 하는 대결기구로 전략”하였다고 주장
 -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인권정책 공조,
 - 남북자문제까지 들고 나와 반북 인권소동 확대 등

5. 분석 및 평가

북한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오히려 미국·일본·한국을 인권침해국이라고 비난

-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이라고 반발
- 국제사회의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미국·일본·한국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불법입국 미국인 고프 석방과 나포한 남측 어선 ‘대승호’ 송환을 북한 인도주의정책의 발현이라고 선전

미국의 인권정책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략책동으로 비난

-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북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 하는데 대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란·러시아·중국 대표들이 ‘관타나모’ 미군기지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주도한 반테러전에서의 인권침해 사태를 지적했다고 전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
- 미국의 의료보험·총기·마약·실업 등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자본주의사회의 취약성 비판

일본 당국은 ‘핵문제’, ‘납치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청산이 급선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

- 인권 논의는 과거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제의 과거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및 배상 촉구
- 일본은 유엔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민족적 차별이라고 규탄

유엔의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비난은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라고 비난

-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
-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절대다수 회원국들의 의사와 이익이 존중되도록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남한의 대북 ‘인권 모략소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비난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라고 비난
-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동족과 대결하려는 책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불만을 표출
-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 방북한 한상렬 목사의 즉각적 석방 및 통일운동단체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

인도주의 사안



- | | |
|------------|----|
| 1. 탈북자 | 37 |
| 2. 납북자 | 56 |
| 3. 국군포로 | 60 |
| 4. 이산가족 | 61 |
| 5. 분석 및 평가 | 66 |

1. 탈북자

서울중앙지법, '황장엽 암살조'에 징역 10년형 선고(7.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북한 경찰총국 공무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함.

통일부, 2011년 3월 제2 하나원 착공 계획(7.5)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추세에 대비해 현재 수용규모 1,000명(본원 750명, 양주 본원 250명)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 제2 하나원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제2 하나원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탈북자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
 - 2011년 3월부터 22개월간 공사를 거쳐 2012년 말 완공할 계획

북한 주민 2명, 동해상으로 귀순(7.5)

- 북한주민 2명이 6월 26일 무동력 목선인 전마선을 타고 동해상(속초 동쪽 40km 해상)으로 귀순한 것으로 밝혀짐.
 - 북한 주민이 전마선을 타고 귀순한 것은 2010년 들어 5번째로, 모두 3월 26일 천안함 사태 이후라는 점에 주목

통일부, 기획·가족 탈북자 증가세(7.6)

- 2010년 여성 및 가족동반 입국과 이미 국내에 입국한 탈북가족이 있는 '기획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에 따르면 가족 동반자 비율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상반기 40% 내외로 급증했으며, 국내입국한 탈북가족이 있는 비율도 2009년 23%에 비해 2010년 40%로 크게 증가
 - 탈북해서 국내로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미만인 탈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30% 수준

통일부-현대차미소금융, 탈북자 창업자금 지원(7.6)

- 통일부와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
 - 7월 6일~8월 5일 제1기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발(8월), 교육·컨설팅(8~9월), 대출(10월~) 등을 추진하기로 함.
 - ‘하나론A’ 대출은 재단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지원 대상자에게 연 2%의 금리로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함.

NK지식인연대, “북한, 탈북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7.7)

- 7일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 중앙당과 보안부는 6월 초부터 합동으로 탈북혐의자·탈북방조자·마약 밀매범·휴대폰 소지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십 명을 체포했고, 이 중 14명이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공개처형 될 예정
 - 이밖에 10명은 ‘10년 이상 교화형’, 20명은 ‘노동단련대’, 18가구는 ‘추방형’, 몇몇은 ‘15일간의 무보수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일본 공관, 탈북자 장기체류(7.8)

-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주중 일본 대사관 및 공관에서 보호 중인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최대 2년째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도
 - 현재 일본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는 10여 명 정도로 1959~1984년 ‘재일동포 북송사업’ 당시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며, 모두 일본으로의 귀환을 원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일본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
 - 일본 정부는 자국 출입국관리법상 일본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전(前) 재일 한국인이나 북한인, 이들의 3촌 이내 가족 탈북자들을 인도적 입장에서 보호해 왔으며, 공관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공관 직원이 따로 접촉해 보호해왔음.

황해도중앙도민회, ‘300만 황해도민 마음 담은 자유풍선 날리기’ 행사(7.8)

- 황해도중앙도민회 회원 300여 명은 임진각에서 실향민 단체로는 최초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30만장을 대형풍선 5개에 매달아 북으로 띄움.

- 연말까지 강원 철원과 인천 백령도, 강화도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300만장을 더 띄울 계획

서울중앙지검, 탈북자 위장 전향 여간첩 석방(7.8)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9년 9월 탈북자로 위장하여 입국한 후 체포되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전향 의사를 표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36)씨를 공소보류하고 석방
 - 김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며 서울지하철 관련 자료 등을 입수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 의사가 명확한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

북한, 중국 윈난·산둥성에 탈북자 체포조 대거투입(7.11)

- 중국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보위사령부와 국가보위부가 6월 합동으로 탈북자 체포조를 조직하고 이들을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산둥(山東)성과 동남아 탈출 루트인 윈난(雲南)성에 대거 파견하여 탈북자들을 색출하고 있음.
 - 탈북자 색출은 통상 국가보위부가 전담하는데 이번에 보위사령부까지 참여하여 미얀마·라오스 국경과 맞닿은 중국 서남부에까지 체포조를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저지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탈북자 출신, 북한연구소 설립(7.13)

-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안찬일 박사가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세계북한연구센터'를 설립함.
 - 탈북자 출신 학자 주도로 북한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며, 북한의 정치 체제 전환과 경제적 개혁·개방의 방향을 모색하고 남북의 사회통합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탈북자 피아니스트, 탈북어린이 위한 연주회 개최(7.15)

- 9년전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철웅(36)씨가 부모 손에 이끌려 탈북한 뒤 한국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희망콘서트' 마련

- NK지식인연대 주도로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디딤돌대안학교'를 알리고 탈북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임.

통일부, 탈북자 심사기간 최장 180일로 연장(7.16)

- 통일부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합동심문(합심) 기간을 최장 180일로 명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자, 이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의견들이 제기됨.
 - 국내입국 시 신원확인 등을 위해 통상 1~2개월 내에서 이뤄졌던 합심이 180일로 연장될 경우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주장
 - 제3국 공관에서 오랜 기간 집단수용생활을 경험한 탈북자들에게 최장 6개월 합심 기간과 하나원 생활 3개월까지 더해질 경우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이 고조된다는 우려

탈북자 관련 영화 '두만강', 파리 국제영화제에서 2개 부문 수상(7.19)

- 재중동포 장률(48) 감독의 영화 '두만강'이 제8회 파리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학생선정상 2개 부문을 수상
 - 탈북자와 그를 친구로 맞이하는 소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두만강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 가는 과정 묘사

통일부-현대차미소금융재단, 창업지원 공고(7.20)

- 통일부와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이 6일 체결한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창업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음.

통일부-대한변호사협회, 탈북자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7.21)

-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를 돕기 위해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
 - 하나원 교육생 대상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 상담실에 담당변호사 지원, 전국 30개 하나센터에 담당변호사 지정·운영 등의 법률 상담 및 교육

북한 국방위원회, 탈북자 사살 지침 하달(7.21)

-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자를 사실상 사살해도 좋다는 취지의 ‘국방위원회 0082’ 지침을 변경지역의 군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짐.
 - 보위부 등은 ‘어떤 이유로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을 넘어오는 자는 몰라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

탈북자, 해커 ‘디도스 공격’ 금품 갈취혐의 구속(7.22)

- 탈북자 양모씨(25)는 2007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수배를 받다 중국으로 도피한 뒤 해커 조직(중국인 3명, 중국동포 2명 등 6명)에 가담하여 한국에 있는 영세 온라인업체를 골라 ‘디도스’ 공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 양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교육업체나 꽃배달 서비스업체 등 한국의 9개 온라인 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서버를 마비시키고 2개 업체로부터 500만원 갈취 혐의
 - 탈북해 중국에서 함께 살던 양씨의 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북송되면서 양씨는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짐.

하나컬처, 탈북자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7.28)

- (주)하나컬처는 8월 15일부터 탈북자들이 취업정보를 나누고 한국사회를 이해하도록 돕는 인터넷방송 ‘통일한마당’(가칭)을 시작한다고 밝힘.
 - 오전과 오후 2시간씩 하루 네 시간 방송되며 홈페이지(www.hanapd.com)에서 들을 수 있음.
 - 자유북한방송이 사회적 기업인 하나컬처를 인수해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정치적 색채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며,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가 하나컬처 대표도 맡지만 10명의 직원을 고용, 별도 운영계획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 자퇴율 감소(8.2)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3월 공개한 ‘2009 탈북 청소년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탈북 청소년들의 재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중도탈락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06~2007년도의 중도탈락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2.8%에서 3.5%, 중학교는 10.1%에서 12.9%, 고등학교는 12.8%에서 28.1%로 상승했던 반면, 2008년에 들어서면서 초등학교는 1.4%, 중학교는 8.8%, 고등학교는 14.4% 수준까지 감소

중국, 국경지대 탈북자 색출 강화(8.2)

-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중국 당국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500km에 걸친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 색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도

탈북자 단체, “북한이 좋으면 가서 살아라” 발언 지지(8.3)

- 탈북자 단체들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서 살아라” 발언을 지지하고 한상렬 목사의 입국 거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 자유북한방송·탈북자동지회·북한전략센터·NK지식인연대·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탈북자단체들이 대거 참여

북한, 화폐개혁 이후 중산층 이상의 탈북자 증가(8.3)

- 2009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중산층 이상이 탈북하는 등 탈북자 유형이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됨.
 - 대북 소식통은 3일, “화폐개혁 실패로 민심이 떠난 데다 비디오·DVD 등을 통해 한류가 북한에 퍼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탈북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함.
 - 특히 최근에는 화폐개혁 때문에 재산을 날린 ‘시장 세력’(시장에서 돈을 번 계층) 중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북한, 지하교회 교인 23명 체포하여 3명 처형(8.4)

-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당국이 한 지하교회를 적발, 교인 23명을 체포하고 지도부 3명을 처형했다고 주장
 - “지난 5월 중순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에서 비밀 지하교회를 운영하던 23명이 보위부에 체포돼 주동자로 판명된 3명은 사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20명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전함.
 - 처형된 3명은 중국 여행을 다니던 중 기독교를 접하고 북한으로 돌아와 가족·친척·지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중앙지법, 신원정보 노출 탈북자 정신적 고통 배상 판결(8.4)

-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김모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원정보 노출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전체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지만 귀순 이후 신원정보가 노출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위협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는 총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힘.

북한, 양강도에 탈북자 가족 격리수용(8.5)

-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호구조사와 함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중 검열’을 실시한 이후 탈북자 가족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양강도 오지에 ‘추방촌’을 조성하여 집단수용하고 있다고 전함.
 - 현지 통신원을 인용, “현재 량강도 백암군 유평노동자구에 전국 각지에서 추방된 수십 세대의 탈북자 가족들이 모여 있다”며 “이들은 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에서 추방된 주민들이고 함경남도 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추방된 주민들도 일부 있다”고 밝힘.
 - “일종의 ‘추방촌’으로 수용소처럼 철조망이나 24시간 감시하는 인원은 없지만 워낙 깊은 산골이라 빠져나가기 힘들고, 설령 빠져나가도 주민 통제가 심한 북한사회의 특성상 타지에 정착하기 어려움”
 - 북한 당국은 이전에도 비교적 가벼운 사안의 범법자들을 양강도 풍서군 화포광산, 후창군 상창광산, 갑산군 삼봉리 등의 오지로 추방해 왔음.

중국 정부, 북한에 경찰장비 지원 서명식(8.12)

- 중국 정부망(www.gov.cn)은 중국 공안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의 초청으로 지난 8일 방북 ‘경찰물자 기증서’에 서명했다고 보도
 - 지난 6월 4일 압록강에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들이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하다가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
 - 중국이 북한에 경찰용 장비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변경지역 범죄 및 탈북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탈북자 지성호씨, 북한인권단체 결성(8.15)

- 탈북자 지성호씨는 지난 4월 남북한 청년과 해외동포가 참가하는 북한인권단체 ‘NAUH(Now, Action, Unity, Human Rights)’를 결성함.

- 탈북자 10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활동하는 NAUH는 그동안 거리 캠페인, 자유아시아방송(RFA) 출연, 2010 남아공월드컵 기간 다큐멘터리 촬영 등의 활동을 벌이며 북한인권 상황을 알려온 바 있음.

북한 인민보안부, '타격대' 를 통한 탈북자 가족 감시(8.16)

-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인민보안부가 전국적으로 시·군·구역의 단위별로 인민보안부 대원 12명으로 구성된 '타격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탈북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는 가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의 시·군·구역 단위가 약 200개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전체에 약 2,400여명의 타격대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타격대의 대장은 시·군 보안서의 수사지도원이나 감찰지도원이 맡게 됨.

북한 미그21 전투기, 중국 랴오닝서 추락(8.17)

-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한 북한 국적의 미그-21 전투기가 17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에 추락하여, 탑승자는 현장에서 사망
 - 중국 당국은 신의주 공군부대 소속의 이 비행기가 훈련 도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탈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 정부, 탈북자의 일본 정착 확대 추진(8.26)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본 정부가 일본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보도함.
 - 일본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제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 "일본 정부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 별목공 출신 탈북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 예정(9.2)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 관계자를 인용하여 "지난 3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 영사관에 진입했던 별목공 출신 탈북자 2명이 내주쯤 미국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보도
 - 이들 탈북자는 8월 25일 모스크바로 이동해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함.

북한 주민, 중국으로 원정 식량약탈(9.8)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굶주림에 지친 북·중 국경지대의 북한 주민들이 최근 중국 마을로 ‘원정 약탈’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함경북도 연사군의 한 주민은 이 방송에 “적게는 5~6명, 많게는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두만강을 건넌다”면서 “대부분 식량을 훔치려고 국경을 넘지만 약 초를 캐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함.
 - 최근 중국 투먼(圖們) 감옥에는 탈북자보다는 ‘원정 약탈’을 하다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짐.

재영 탈북자, 북한-영국 수교 10주년 규탄(9.8)

-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정권 수립 62주년’ 및 ‘북·영 수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영 북한대사관의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
 - 재영 조선인총연합회 소속 탈북자 10여 명은 “국제사회가 독재자 김정일과 그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시위
 - 유럽지역에는 영국 350명을 비롯해 스웨덴·노르웨이·벨기에·독일 등에 모두 4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정착해 있으며, 이들은 최근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를 구성함.

군인 출신 탈북자, ‘북한인민해방전선’ 출범(9.9)

- 군인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북민전)은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인 9일 발족식을 연다고 5일 밝힘.
 - 인민군 대위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북민전 대표를 맡고 군인 출신 탈북자 2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
 - 북민전은 홈페이지(www.nkplf.com)를 통해 대북 정보전을 통해 북한군을 체제 전복의 주체로 변화, 북한 내 반정부세력과 연합해 독재정치 교란 활동 전개, 김정일 부자와 독재권력집단을 청산하기 위한 ‘결사행동대’ 활동, 북한군 정보 수집 등을 활동 목표로 밝힘.

미국의 소리방송, 100번째 탈북자 미국 입국(9.9)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러시아 별목공 출신 조씨가 100번째 탈북 난민으로 8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미국 정부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5월 5일 탈북자 6명을 최초로 난민 자격으로 망명을 허용하였고, 이후 매년 20~30명의 탈북자가 태국·중국·몽골·러시아·필리핀·라오스 등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
-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취득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탈북자단체 및 납북자단체, 대북전단 10만장 살포(9.10)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에 임진각에서 북한의 세습정치를 규탄하는 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냄.

탈북자, 제3국 '위장 망명' 증가(9.15)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으로의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정부는 2009년 탈북 위장 망명자 20여 명을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고,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 위장 망명자가 1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실제 탈북자의 제3국 망명 신청은 영국의 경우 2004년 20명, 2005년 30명, 2006년 45명, 2007년 410명, 2008년 19명, 2009년 25명이었으며, 노르웨이는 2005년 9명, 2006년 26명, 2007년 90명, 2008년 130명인 것으로 집계됨.

탈북자단체,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9.15)

- 군인출신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회원들이 국민행동본부 등 국내 보수단체와 함께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아 강화군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냄.
 - 대형풍선 50개에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비롯해 북한의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장면 등이 담긴 DVD와 미화 1천 달러를 나눠 담아 북한으로 보냄.

미 하원, 탈북자 청문회 개최(9.23)

-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단체 대표와 탈북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탈북자 현황 청문회 개최
 - 탈북여성인권연대 강수진 대표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 2만 명 중 78%가 여성이며, 올해 100명의 탈북여성을 인터뷰한 결과 90%가 중국에서 인신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
 - 북한인권단체 ‘318 파트너즈’ 스티브 김 대표는 “중국이 계속 탈북여성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중국 당국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이들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

국방부, 탈북자 및 병역면제자 예비군 편입방안 검토(9.24)

- 국방부는 지난 4월 민간연구소에 탈북자 등 병역면제자의 예비군 편입 수요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이달 말 그 결과가 나오면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남한입국 탈북남성의 수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5,817명(통일부 자료)이며, 이들 중 실제 예비군 복무가 가능한 20대 남성 탈북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체 탈북자 중에 20대가 25% 라는 점에서 1,500명 이내로 추산됨.
 - 탈북자들의 예비군 복무는 단순히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북·중 치안당국, 중국 전역서 탈북자 합동 단속(9.27)

- 아사히신문은 북한 비밀경찰과 중국 치안당국이 합동으로 윈난(雲南)성, 광시(廣西) 장족자치구, 산둥(山東)성 등 중국 각지에서 몰래 일하고 있는 탈북자를 잡아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등 복수의 치안기관에서 파견된 100여 명의 비밀경찰과 중국 무장경찰 수백 명이 수명 단위로 팀을 짜 6월경부터 중국 전역에서 탈북자 색출 활동
 - 북·중 치안당국이 중국 전역에서 합동 단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28일 조선노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북한이 내부 단속을 위해 대대적인 ‘탈북자 사냥’을 전개하고 있을 가능성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식 출범(9.27)

-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창립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해산하고,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한 것임.
 - 담당업무도 탈북자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취업지원, 장학사업 등 후원회의 기존 업무에서 탈북자 관련 직업훈련, 전문상담인력 양성, 민간단체협력,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탈북자 실태조사, 통계사업 등으로 확대

‘북한이탈여성 지원과 연대’ 출범(9.29)

- 탈북여성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한국여성운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여성 지원과 연대’가 공식 출범식 개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운상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탈북여성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탈북자와 남한 주민, 인식비교 여론조사(10.4)

-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탈북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공동 조사한 남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식비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기존의 남쪽 주민들보다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 시기에 대해 탈북자들의 46.4%가 ‘10년 이내’라고 답했으며, ‘10~20년 이내’가 23.7%, ‘20년 이상’이 29.8%인 반면, 남한 주민은 23.5%만 통일시기를 ‘10년 이내’라고 답했으며 ‘20년 이상’이 34.9%로 가장 많았고 ‘10~20년 이내’는 30.4%임.
 - ‘한국사회의 포용력’에 대해선 탈북자(44.3%)가 남쪽 주민(83.3%)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10.5)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김영우 의원은 9월 15~30일 하나센터 30곳과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를 통해 탈북자 222명을 상대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 형편을 묻는 질문에 66%가 ‘어렵다’고 응답

- 개인당 한 달 평균수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인 '50만원도 안 된다'고 답한 이가 118명(56%), '100만원 미만'이 44명(21%), '150만원 미만' 이라는 응답자는 34명(16%)임.
-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때 차별받는지 여부에 대해선 63%가 차별을 받으며, 입국초기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한다고 지적
- 조사 과정 중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이가 14%였고 성경험 여부를 조사받은 여성탈북자의 80%가 남성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 장관, 중국 내 탈북자 10만 명 추정(10.5)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탈북자 수에 대한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중국 안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
 - 북한 비밀경찰과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계속 노력” 경주 피력

통일부, 국내 정착 탈북자 현황(10.6)

-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탈북자는 2010년 8월 현재 19,569명으로 월 평균 2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음.
 - 2000년까지 1년에 300여 명에 불과했던 탈북 입국자는 2001년 1,000명을 넘어선 뒤 2006년 2,018명, 2009년 2,927명으로 급증

탈북자단체, 북한 3대 세습 강력 규탄(10.7)

- (사)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24개 탈북자단체들은 보신각 앞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정일-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독재정권 세습을 강력히 비난
 - 연합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저주스런 3대 권력 세습은 북한인민들을 무시하고 세계 진보적 인류의 우려에 도전하는 말세적 봉건왕조세습이며 천추에 용서 못할 민족사의 만고대죄”라고 비난

북한자유연맹, 민주당에 대해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10.8)

- 탈북자단체인 북한자유연맹 소속 회원 수십여 명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 연맹은 성명을 통해 “북한 동포들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가치를 보장받고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사망(10.10)

- 황장엽(87)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전 노동당 비서)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국은 심장마비로 추정
 - 황 위원장은 국내에 입국한 최고위층 북한 인사로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와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등을 역임하고 1997년 국내에 입국

탈북자단체, 임진각서 대북전단 2만장 살포(10.10)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 300여 명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임진각에서 북한의 3대 세습 등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냄.
 - ‘2천만 동포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북한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2만장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랩음악 CD,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띄워 보냄.

탈북자 15명, 미소금융서 첫 대출(10.11)

- 통일부는 “현대자동차미소금융재단이 최근 탈북자 15명에게 총 4억4,6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했다”고 밝힘.
 - 사업자금 지원을 받은 15명은 화장품 매장, 무역업, 치킨점, 음식점, 운수업, 건설업 등 기존에 이미 창업한 탈북자들로 사업 확장 계획
 - 이와 별도로 탈북자 12명은 신규 창업을 위해 현대차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창업교육을 수료했으며, 창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컨설팅을 받은 후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예정

탈북자, 조총련 앞에서 북한세습 반대 시위(10.12)

- 탈북자 등 10여 명이 도쿄(東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본부 앞에서 “김정은 3대 세습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 28년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지난해 3월 탈북했다는 김혜숙(가명)씨는 “김정남도 반대하는 3대 세습을 그만두라”라고 촉구

일본 정부,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 100명 초과(10.20)

- 마쓰모토(松本剛明) 외무 부대신은 참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100명을 넘는다”고 언급함.
 - 일본행 탈북자 대다수는 1960~7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 동포나 일본인 처,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짐.

군인출신 탈북자, 전체 탈북자의 1%(10.22)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이후 2010년 4월 말까지 총 179명의 탈북 군인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탈북자의 약 1%에 해당함.

화교 탈북자 5명, ‘무국적자’로 분류 방치(10.25)

-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북한에서 살다 남한으로 오기 위해 탈북한 화교 탈북자 5명이 ‘무국적 탈북자’로 분류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음.
 - 화교 출신 아버지와 북한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북한에서는 화교로 등록되어 있지만 중국의 호구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
 - 한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했지만 중국에서는 호구가 없다는 이유로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송환도 불가능한 상황

탈북자단체, 주미 중국 대사관 시위(10.27)

- 한국의 탈북자단체들과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이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용인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임.
 - NK지식인연대와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미주 탈북자선교회, 미주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 총연합회, 하나한인교회소속 탈북자들과 한인교포 10여 명 참석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한국 영사관 진입(10.29)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측을 인용, 러시아 내 북한 벌목공 출신 탈북자가 지난 26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영사관에 진입해 한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
 - 40대 초반 탈북자 최모씨는 2000년대 초반 힘들게 일해도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북한 벌목사업소를 탈출해 하바로프스크 등에서 생활해왔다고 밝힘.

-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임업대표부가 벌목사업소들을 대거 철수할 것”이며 “러시아 당국과 마찰이 잦은데다 중국인들이 벌목 사업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

통일부, 탈북자 의료급여 5년간 보장(10.29)

- 통일부는 일정한 소득수준에 미달한 탈북자의 경우 정규직에 취업하여도 5년의 거주보호기간 중 남은 기간 의료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힘.
 - 탈북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면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돼 왔었음.
 - 정부는 11월 1일부터 탈북자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탈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1인 기준 50만4천원)의 4배 이하인 경우 남은 거주보호기간 동안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북한 인민보안부, ‘타격대’ 를 통한 주민통제 강화(11.8)

- NK지식인연대는 북한 인민보안부 ‘타격대’가 “최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모든 열차를 40분~1시간씩 정차시키고 여행자는 물론 열차승무 보안원들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함.
 - 인민보안부는 2010년 4월 ‘타격대’ 설립을 지시했고 이후 6월에 각 도·시 마다 보안국(지방 경찰청) 안에 ‘타격대’ 라는 상설 조직이 구성되어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
 - 인민보안부 타격대는 국경지역 중국 핸드폰 사용자, 마약 밀매업자, 탈북자를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시민단체, 중국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시위(11.8)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북한강제수용소 폐쇄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임.

탈북자, 일본 의원 대상 북한인권 실태 증언(11.8)

- 일본의 ‘북한난민과 인도적 문제에 관한 민주당 의원연맹’ 주최로 도쿄 의원회관에

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혜숙(48·가명)씨가 북한의 수용소 실태 및 인권상황을 증언함.

- 김 씨는 1975년(당시 13세) 전쟁 때 월남한 할아버지에 대한 연좌제로 평안남도 '18호 관리소'에 수감됐었으며, 28년간의 수감생활 이후 풀려난 김씨는 2008년 탈북 2009년 한국에 입국

통일부, 국내입국 탈북자 2만 명 돌파(11.15)

- 통일부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11월 11일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늘 현재 2만 5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를 모두 합한 숫자
 - 누적 기준으로 국내입국 탈북자는 1999년 1천 명을 넘어선 후 2007년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후 3년 만에 2만 명대를 초과
 - 이 가운데 여성이 2002년부터 남성 입국자를 추월하기 시작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함경도 출신(77%) 및 20~40대(75%)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음.

북한 두만강변 국경지역에서 '자살 위장' 탈북 증가(11.18)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두만강 연안의 국경지역에서 최근 '자살 위장'이 의심되는 탈북자들이 부쩍 늘어, 국경경비대에 시신을 찾아 강을 수색하는 '행방불명자 수색 전담반'까지 등장했다고 보도
 - “지난 6월 자살로 위장해 탈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잡혀온 이후 유사한 탈북 사례가 늘자 국경경비대에 일명 '시체조'라 불리는 수색반이 가동된 것”이라고 언급

북한 식량난으로 태국행 탈북자 50% 증가(11.20)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태국에 불법 입국한 탈북자 수가 2009년 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 태국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 관계자는 “태국을 거치는 탈북자 수가 작년에는 2,000명 수준이었고 올해는 연말까지 3,000명이 될 전망”이라고 말하며 “탈북자들이 밝힌 탈출의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식량난과 악화된 경제상황”이라고 설명

러시아 파견 북한 벌목공, 월급 70% '당자금' 명목 회수(11.21)

- 북한 임업대표부 산하 러시아 파견 벌목노동자들의 탈출이 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과도한 '임금 착취'가 원인이라는 증언이 나온다.
 - 최근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 벌목공 탈북자 송기복(가명·48)씨는 18일 "임업사업소에서는 월급의 70%를 '당(黨)자금' 명목으로 걷어간다"며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다 빼앗기는 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말한다.
 - 북한은 통상 러시아 벌목공의 임금 30%를 '충성의 당자금'으로 회수했는데,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2008년부터는 회수금을 임금의 70%로 늘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식 출범식 개최(11.2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아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체계화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착지원체계를 재편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재단은 탈북자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과 취업지원, 장학사업, 전문상담인력 양성 및 상담사업 등을 진행하며, 탈북자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탈북자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

세계북한인총연맹 결성 예정(11.23)

- 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방송·NK지식인연대 등 한국 내 대표적 탈북자단체와 미국·캐나다·일본·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참여하는 '세계북한인총연맹'이 26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창립식을 할 예정
 - 초대 위원장을 맡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3일 "20여개국에 퍼져 있는 15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즐기차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총연맹 내부에 북한연구소를 두고 북한체제의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함.

중국, "북한 급변사태 시 탈북자 30만 수용 계획"(11.30)

-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 국제기구 대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탈북자를 3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나 난민유입이 일거에 이뤄질 것이므로 국경통제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같은 내용은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뉴욕 타임스 등을 통해 미국의 외교전문 25만건을 공개한 내용에 포함돼 있음.

북한판 386 탈북자 국내입국(12.2)

- 최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언급한 '고위 탈북자 망명'과 관련, 북한 양강도 설정식(40) 청년동맹 제1비서가 2009년 6월 탈북해 남한으로 망명한 것으로 확인됨.
 - "설정식은 작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30~40대 인물들이 중앙·지방의 요직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목받았던 인물 중 한 명"
 - "북한판 386인 설씨는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고 남한 드라마 등을 좋아했는데 이런 성향 때문에 문제가 생겨 탈북한 것"으로 추정

탈북자, 특별예비군에 편입 요구(12.7)

-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분노한 탈북자들이 한국 예비군에 '특별편입'을 요구함.
 - 북한인민해방전선(북민전)은 "탈북자 330여 명으로부터 '탈북민 특별예비군' 설립과 편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았고 앞으로 1,000명을 채울 때까지 탄원서를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 북민전은 오는 1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규탄 궤기대회를 갖고 이 탄원서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할 예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자의 경제활동 상태 열악(12.16)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입국한 전국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녀 탈북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 511명 중 취업자 464명, 실업자 47명으로 실업률이 9.2%에 달함.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43만1,000원으로 집계됨.

북한, 연평도 도발 이후 탈북 도강 비용 증가(12.16)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감시가 강화돼 탈북자들의 도강(渡江)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보도함.

- 지난 11월 초 탈북 비용은 한국 돈 200만~250만원 정도였지만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경을 봉쇄해 “두만강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중국인이 탈북 비용으로 한국 돈 400만원, 미화로 3,500달러나 요구하고 있다”고 전함.
- 데일리NK도 “최근 김정은의 지시로 중앙당과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검열대가 국경지역에 파견되어 탈북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지시로 5호 담당제가 3호 담당제로 바뀌는 등 주민들 사이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보도함.

탈북자단체, 연평도에서 대북전단 살포(12.18)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소속 탈북자들은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날려 보냄.
 - 이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500장, 1달러 지폐 1,000장도 함께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냄.

북한, 연평도 포격 이후 탈북자 가족 ‘감시’ 강화(12.23)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보안당국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
 - 탈북자 박정철(32·가명)씨는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국경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보위부에 소환됐는데, 남한의 내 주소까지 다 알고 있으니 통화하거나 탈북할 생각을 말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말함.

2. 납북자

16년 복역 ‘납북어부’, 간첩누명 벗고 무죄 선고(7.8)

-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가 26년 만에 누명을 벗음.
 -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한 정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

미국 법원, “북한, 납북 김동식 목사 유족에 4100억원 배상” 판결(8.11)

- 2000년 1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북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이 3억5,000만 달러(약 4,100억원)를 배상하라고 미국 법원 판결

납북자가족모임, 김정일 고소할 계획(8.29)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납북자 10명의 가족들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고문피해자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납북 사실을 증명하는 정부 문건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우리 사법부에서 기소 의견을 받아내고, 여의치 않으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까지 검토 중

보수시민단체, 대북지원보다 국군포로·납북자 생환 시급 지적(9.13)

- 정부가 쌀 등 수해 구호물자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구호물자 지원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

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생존확인 국군포로·납북자 31명(9.14)

-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된 이래 북한이 상봉 행사를 통해 생존을 확인해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31명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입각하여 올해 1월 현재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14명, 전후 납북자는 17명이라고 밝힘.

통일부, 6·25 납북자 피해신청 접수(9.14)

- 통일부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피해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납북자 여부를 공식 인정기로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납북자 공식인정 여부를 결정

통일부, 미귀환 납북자 517명 집계(10.5)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김호연 의원이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납북자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009년까지 납북자 수는 3,826명으로 이 중 귀환한 사람은 3,309명임.
 - 미귀환 납북자는 선원(458명), 군인·경찰(30명), KAL기 납치 사건 피해자(11명), 해외에서 납치돼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12명), 1970년대 국내에서 납북된 학생·농부(6명) 등 총 517명으로 이중 최소 22명이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집계

창원지법, 월북 오인 납북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10.6)

- 창원지법 제1행정부(안창환 부장판사)는 1977년 월북을 결심한 군 동료가 모는 비행기에 탑승한 바람에 북한에 끌려간 후 실종·사망처리된 전 육군 군무원 조병욱(당시 37세)씨의 부인 문모(64)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사망처리는 국가유공자법상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 군은 조병욱씨를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씨 가족이 소송을 제기

국제 납북자 대회 개최(11.1)

- 한국·일본·태국·루마니아 등의 납북자 가족과 단체 관계자들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연합대회’ 분행사를 갖고 납북자문제의 국제화를 촉구
 - 2007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이후 3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이즈카 시게오 피랍일본인가족회 회장은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와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발언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강조

정부 의뢰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수준 저조(11.4)

- 정부가 그 동안 이산상봉 계기에 200여명 이상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을 의뢰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생존여부를 확인받은 비율은 30%에도 미달

- 2000~2009년 기간 동안 국군포로 111명, 전후납북자 109명, 전시납북자 16명 등 236명의 생사확인이 의뢰됐으며 이 가운데 총 68명의 생사확인(국군포로 27명, 전후납북자 39명, 전시납북자 2명)
- 올해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26명(국군포로 10명, 전후납북자 11명, 전시납북자 5명)에 대해 생사확인을 의뢰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 1명(사망)을 제외하고 전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납북자가족,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관심 제고 촉구(11.17)

- 납북자 가족들이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며 농성
 -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납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촉구(12.10)

-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0일 KAL기 납북(1969.12.11) 41주년을 맞아 억류된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을 촉구
 - 황 대표는 1969년 12월 11일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51명 중 승객 39명만 귀환하였고 11명이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있다”고 밝히며 북한 당국에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강력히 촉구

6·25전쟁 납북자 진상 규명 작업 시작(12.13)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감.
 - 위원회는 김항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등 정부위원(6명)을 비롯해 전시납북자가족(3명), 민간위원(6명) 등 15명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강제 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활동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3. 국군포로

국제사면위원회(AI), 국군포로 정상운씨 구명 탄원 호소(8.20)

- 2009년 8월 탈북 했으나 중국 공안에 붙잡혀 금년 2월 19일 강제 복송된 국군포로 정상운(84)씨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돼 생명이 위험한 상태
 - 정씨는 한국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인민군에 포로로 잡히고 나서 북한에서 광부로 50년간 강제노동
 - 국제사면위원회는 “정씨의 상황을 전 세계 회원에게 알리고, 북한 최고위 당국자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탈북여성, 국군포로 아버지 명예 회복(8.25)

- 2004년 탈북해 제3국을 거쳐 2008년 5월 한국에 입국한 김모(44·여)씨는 아버지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6·25전쟁 당시 2사단 17연대 소속이었다는 인적사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김씨의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국군포로임을 인정

국방부, 북한 거주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시 ‘특별예우’ (10.17)

- 국방부는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가 남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때 일반 이산가족보다 더 예우하는 방안 추진
 - 이산가족 상봉단에 국군포로 가족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키고 상봉 방식도 동숙(同宿·한 방에서 같이 잠) 상봉 및 재상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500여 명이며 지금까지 국군포로 79명이 남쪽으로 귀환했으며, 귀환자 중 17명은 사망했고 62명은 생존

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국군 출신’ 4명 포함(11.1)

- 북한은 10월 30일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 때 남한에서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 출신’ 4명을 상봉자에 포함
 - 통일부에 따르면 2000~2009년 17번의 이산가족 상봉에서 7명의 ‘국군 출신’과 6명의 ‘국군포로’가 남한 가족과 상봉

탈북 국군포로, 59년 만에 귀환(11.2)

- 지난 4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의 재외공관에서 보호를 받던 국군포로 김모(84)씨가 2일 한국에 도착
 - 김씨의 귀국으로 국군포로 출신으로 생환한 사람은 모두 80명

북한, 중국 정부 확인 국군포로 '생사확인 불가' 통보(11.4)

- 북한 당국은 남측 가족·친지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북한 억류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해서도 생사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통보
 -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지난달 후보자 생사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은 국군포로 10명과 납북자 16명 가운데 1명(사망 통보)을 제외하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통보
 - 북한이 통보한 '생사 확인 불가' 명단에는 2004년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강제복송된 국군포로 한택만(79)씨도 포함돼 있음.

4. 이산가족

조선적십자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9.10)

-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9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앞으로 추석(9월 22일)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는 통지문 발송
 - 장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 표명

통일부, 이산가족 실무접촉에서 전면적 생사확인 요구 예정(9.16)

-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등록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8천129명 중 34.7%(4만4천444명)가 이미 사망하여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시급한 실정
 - 2000년 이후 2009년 추석까지 모두 17차례의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이뤄져, 모두 1만7천100명(남북 합계)의 이산가족이 혈육을 만난 것으로 집계
 -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생존해 있는 상봉 신청자 8만3천685명(해외 거주 1천11명 포함) 중 80세 이상은 3만3천989명으로 약 40.6%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성에서 개최(9.17)

- 9월 17일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상봉 일정(10월21~27일)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장소와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 도출 실패
 - 북한이 상봉 장소에 대해 '금강산지구 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 우리측은 금강산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시
 - 북측은 2010년 4월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문화회관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음.
 - 9월 24일 2차 실무접촉을 갖고 장소 문제를 포함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함.

북한, '이산가족' 고리로 금강산 관광 압박(9.20)

-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9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24일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상봉장소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광재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 일꾼 2명을 내보내려고 하니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관계자들이 함께 나와달라"고 요구
 - 북측의 이 같은 언급은 2008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해석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함께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남북적십자 2차 실무접촉, 추가 실무접촉 계획(9.24)

- 대한적십자사와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24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2차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북측이 '상봉 장소를 매개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북측은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동결된 만큼 금강산면회소 이용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
 - 남북적십자사는 10월 1일 추가 실무접촉 예정

조선중앙통신, “이산가족 상봉연기는 모두 남측 책임” 비난(9.25)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2차 실무접촉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이는 모두 남한 잘못”이라고 비난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 사안 천명(9.27)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 “북측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의 문제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천명

법무부, 통일 후 이산가족 분쟁 대비 ‘남북 가족 특례법’ 마련(9.29)

- 법무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
 - 특례법은 모두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
 -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받을 때 남한 주민의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증여로 받은 남한 내 재산의 국외 반출 제한 등

남북적십자 3차 실무접촉, 이산가족 상봉 일정 및 장소 합의(10.1)

- 10월 1일 개성에서 열린 세 번째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10월 30일~11월 5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 남과 북 각각 100가족씩으로, 10월 30일~11월 1일 북쪽 방문단 100명이 먼저 남쪽 가족을 만난 뒤, 11월 3~5일 남쪽 방문단 100명이 북쪽 가족과 상봉하기로 합의

통일부, “금강산 관광 당국 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 후 추후 통보”(10.12)

-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5일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통일부가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

남북적십자,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10.18)

- 남북 적십자사가 10월 18일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
 -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의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62명의 가족이 남한에 생존해 있음을 확인
 - 북측은 남측의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40명의 가족이 북한에 생존해 있음을 확인

통일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건수 집계(10.20)

- 통일부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9월 남북교류협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989년 6월 1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은 1,733건으로 같은 기간 남북 간 공식적으로 이뤄진 상봉 건수(4,130건)의 약 42%
 - 성사 장소별로는 중국이 1,669건(96.3%), 일본이 20건(1.2%)이었으며 다른 국가 10건(0.6%), 무응답 34건(1.9%)으로 집계

남북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합의 실패(10.27)

- 남북은 10월 26~27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
 -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의 대가로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지원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실무회담도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
 - 우리측은 쌀·비료 대규모 지원은 당국 간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별개문제라는 입장 표명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10.30~11.5)

- ‘1차 상봉’ 행사 참가자 533명(북측 상봉신청자 97명과 남측 가족 436명)은 10월 30일~11월 1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혈육 상봉
 - 당초 북측은 상봉신청자 100명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그 이후 본인 건강악화, 남측 가족 사망 등으로 인해 3명이 빠짐.
- ‘2차 상봉’ 행사에서는 남측 상봉신청자 94명과 동반가족 43명이 북측 가족 203명을 11월 3일~11월 5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

- 당초 남측은 상봉신청자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6명이 포기함.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제의(11.11)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11월 11일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11월 19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

통일부, “북한, 금강산 동결·몰수 해제” 강조(11.17)

-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북측의 당국 간 회담 요구에 대해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17일 발송
 - 북측이 먼저 2010년 4월에 취한 우리 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정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해 이산가족 상봉 강조(11.19)

-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1월 19일(한국시간)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및 정례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를 환영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은 있지만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는 이번이 최초

통일부, ‘남북 적십자회담 무기 연기’ 발표(11.23)

- 통일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따라 11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힘.
 - 남북은 25일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음.

북한 주민, 100억 유산 걸린 친자소송 첫 승소(12.1)

-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임을 인정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윤씨의 아버지는 1933년 결혼해 2남 4녀를 뒀지만 6·25당시 큰 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1959년 재혼해 다시 4자녀를 더 낳았고 병원 운영으로 상당한 재산도 축적했지만 1987년 사망
- 윤씨의 큰누나(고인과 월남한 큰딸)는 동생들의 생존 소식을 듣고 북한을 왕래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동생들의 소송 위임장과 모발 및 손톱, 공민증 등 영상자료를 전달받아 지난해 2월 소송 제기
- 북한 주민이 낸 친자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

북한, 6·25납북 진상규명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장애(12.24)

- 북한의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4일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

5. 분석 및 평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수색 및 탈북자 가족 감시 강화

-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및 화폐개혁 이후 사회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당국의 탈북 단속이 강화됨.
 - 탈북 및 국내입국을 증대하는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 남부지역에까지 단속요원을 파견
 - 북·중 국경단속 강화로 탈북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입국 가족들의 재정지원 등을 통한 가족연쇄입국 비율이 증가
 - 도강안내자들을 ‘인신매매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탈북관련 보안원들의 뇌물공여를 막기 위해 ‘타격대’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한 단속을 시도
 -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등도 정기적으로 시행
 - 국경단속 강화로 탈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고위층 혹은 부유층들의 탈북비용이 증가
 - 국경지역에서는 ‘자살’로 위장하여 탈북 이후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시도 및 모방사례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북·중 국경지역 단속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 탈북 및 국경지역 밀수 등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은 국경지역 단속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경지역 총격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안당국 간 협의 구체화
 -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찰용 장비 지원

탈북자 국내입국 기간 단축

- 탈북 이후 태국 등 동남아국가 내 체류기간 동안 보호를 위한 현지국가와 우리 정부의 정책협력이 지속되면서, 경유국 체류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되고 있음.
 - 입국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 및 정책적 시정의지들이 고조되면서, 브로커 및 단체들의 가혹행위들이 감소

탈북자 정착지원정책 지속적 보완

-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효율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탈북자관련 보험사기 및 범죄사건 발생으로 인해 정착지원 활동 강화 필요성이 부각됨.
 - 특히 입국자 2만 명 돌파를 기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출범시킴.
 -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의료보호 관련 제도보완
 -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령 등 관련법률 개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에 탈북자 정착지원 활동 반영 등 협력 유도 노력 강화

탈북자단체의 규모 및 활동영역 확대

- 탈북자로 결성된 단체들의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북한 내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북한내부 정보를 신속하게 전하는 활동들이 강화
 -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상 비교우위를 강조
 - 국내정착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탈북자 정착지원 활동 확대
 -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대북규탄 쫓기대회 및 대북전단 살포 등 활동 강화

- 세계북한인총연맹 결성계획 등을 통해 북한규탄 및 북한민주화 촉구 국제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 신원노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대상 배상 소송 제기 및 하나원 내 인권 침해폭로 시위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권리 주장
- 군인출신 탈북자단체 결성 및 탈북자 예비군 특별편입 요구
- 북한 3대 세습 규탄 및 중국의 탈북자 송환중단 촉구시위를 국내외적으로 지속
-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반대입장 규탄 등 정치적 성향을 부각

납북자문제의 국제문제화 확산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납북자 10명의 가족들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고문피해자들은 8월 29일 김 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납북자문제는 본격적으로 국제문제화 될 것으로 전망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미진

- 2000~2009년 기간 동안 국군포로 111명, 전후납북자 109명, 전시납북자 16명 등 236명의 생사확인이 의뢰됐으며 이 가운데 총 68명의 생사만 확인(국군포로 27명, 전후납북자 39명, 전시납북자 2명)되어 확인 비율이 30%에도 미달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확대될 필요

북한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연계 전술 지속

- 북한은 11월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아 향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남북경협 등을 연계시킬 가능성이 제고

북한 주민의 남한 친자 및 친척 확인 증가

-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남한 법원으로부터 친자확인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United Nations

A/C.3/65/L.47



General Assembly

Distr.: Limited
28 October 2010

Original: English

Sixty-fifth session

Third Committee

Agenda item 68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lbani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aco,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draft resolu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at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fulfil the obligations t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¹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²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³

Not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December 2009, and hoping that the review will encourage the engag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so a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¹ See resolution 2200 A (XXI), annex.

²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77, No. 27531.

³ *Ibid.*, vol. 1249, No. 20378.

Recall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treaty-monitoring bodies under the four treatie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wit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children,

Noting the decision on the resumption, on a modest scale, of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ncouraging the engagement of the Govern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rogrammes benefit the persons in need of assistance,

Recalling its resolutions 60/173 of 16 December 2005, 61/174 of 19 December 2006, 62/167 of 18 December 2007, 63/190 of 18 December 2008 and 64/175 of 18 December 2009,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s 2003/10 of 16 April 2003,⁴ 2004/13 of 15 April 2004⁵ and 2005/11 of 14 April 2005,⁶ Human Rights Council decision 1/102 of 30 June 2006⁷ and Council resolutions 7/15 of 27 March 2008,⁸ 10/16 of 26 March 2009⁹ and 13/14 of 25 March 2010,¹⁰ and mindful of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its coordinated efforts aimed at achieving the implementation of those resolutions,

Not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agree to a survey of the food situation by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Taking note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¹¹ regretting that he still has not been allowed to visit the country and that he received no cooper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aking note also of the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4/175,¹²

No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dialogue,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Taking note with appreciation of the recent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cross the border, which is an urgent humanitarian concer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and hoping that necessary arrangements for further reunions on a larger scale and regular basis will be made as early as possible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⁴ See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3, Supplement No. 3 (E/2003/23)*, chap. II, sect. A.

⁵ *Ibid.*, 2004, *Supplement No. 3 (E/2004/23)*, chap. II, sect. A.

⁶ *Ibid.*, 2005, *Supplement No. 3 and corrigenda (E/2005/23 and Corr.1 and 2)*, chap. II, sect. A.

⁷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53 (A/61/53)*, chap. II, sect. B.

⁸ *Ibid.*, *Sixty-third Session, Supplement No. 53 (A/63/53)*, chap. II.

⁹ *Ibid.*, *Sixty-four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4/53)*, chap. II, sect. A.

¹⁰ *Ibid.*, *Six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5/53)*, chap. II, sect. A.

¹¹ A/65/364.

¹² A/65/391.

1. *Express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a) The persistence of continuing reports of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cluding inhuman conditions of detention,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s; collective punishments; and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ii)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including the punishment of those who leave or try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or their families, as well as punishment of persons who are returned;

(iii)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anctions imposed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and, in this regard, urges all States to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treat those who seek refuge humanely and to ensure unhindered access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his Office,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those who seek refuge, and once again urges States parti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¹³ and the 1967 Protocol thereto¹⁴ in relation to refuge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covered by those instruments;

(iv)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equal access to information, by such means as the persecution of individuals exercising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ir families, and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of his or her country;

(v) The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have led to severe malnutrition, widespread health problems and other hardship for the popul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for persons belonging to particularly exposed groups, inter alia,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vi) Continuing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particular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and the subjection of women to human smuggling, forced abortions,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cluding in the economic sphere, and gender-based violence;

¹³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89, No. 2545.

¹⁴ *Ibid.*, vol. 606, No. 8791.

(vii) Continuing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e continued lack of access to bas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many children, and in this regard notes the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faced by, inter alia, returned or repatriated children, street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whose parents are detained, children living in detention or in institutions and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¹⁵

(viii) Continuing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on the use of collective camps and of coercive measures that targe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ix) Violations of worker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strike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 and the prohibition of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of any harmful or hazardous work of children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²

(b) The continued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cogniz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to extend cooperation to him, despite the renewal of the mandate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its resolutions 7/15,⁸ 10/16⁹ and 13/14;¹⁰

(c) The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rticulate which recommendations enjoyed its support following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a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regrets the lack of actions taken to date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final outcome;

2. *Reiterat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unresolved questions of international concern relating to abductions in the form of enforced disappearance, which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nationals of other sovereign countries, and in this regard strongly calls up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rgently to resolve these questions, including through existing channels, in a transparent manner, including by ensuring the immediate return of abductees;

3. *Expresses its very deep concern* at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partly as a result of frequent natural disasters, compounded by the misallocation of resources away from the satisfaction of basic needs, and the increasing State restrictions on the cultivation and trade in foodstuffs, as well as the prevalence of chronic malnutrition particularly among the most vulnerable groups, pregnant women, infants and the elderly, which, despite some progress, continues to affect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hildren, and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to take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cooperating where necessary with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onitoring humanitarian assistance;

¹⁵ See CRC/C/PRK/CO/4.

4. *Commends* the Special Rapporteur for the activities undertaken so far and for his continued efforts in the conduct of his mandate despite th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5.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full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this regard:

(a) To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mentioned above, inter alia, by implementing fully the measures set out in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recommendations address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context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the 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and treaty bodies;

(b) To protect its inhabitants, address the issue of impunity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brought to justice before an independent judiciary;

(c) To tackle the root causes leading to refugee outflows and prosecute those who exploit refugees by human smuggling, trafficking and extortion, while not criminalizing the victims, and to ensure that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able to return in safety and dignity, are humanely treated and are not subjected to any kind of punishment;

(d) To extend its full cooper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including by granting him full, free and unimpeded acces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oth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so as to make a full needs assess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e) To engage in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her Office, as pursued by the High Commissioner in recent year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nd striving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made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uncil;

(f) To engage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ith a view to significantly improving workers' rights;

(g) To continue and reinforce its cooperation with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gencies;

(h) To ensure full, safe and unhindered access to humanitarian aid and take measures to allow humanitarian agencies to secure its impartial delivery to all parts of the country on the basis of ne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as it pledged to do, and to ensure access to adequate food and implement food security polici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i) To improv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ountry team and development agencies so that they can direct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ivilian population, including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dures;

A/C.3/65/L.47

6. *Decides* to continue its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its sixty-sixth session, and to this end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pecial Rapporteur to continue to report hi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제65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국문요지¹⁾

(전 문)

- 유엔회원국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국제협약상 지게 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
- 2009.12월 개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주목하며, 동 검토가 인권분야 국제협력 노력에의 북한의 참여를 촉진하여 북한 인권상황에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
-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에 대한 이행감시기구의 최종견해를 상기
- 북한의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을 평가
-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내 활동 재개 결정을 주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것을 권장
- 북한이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상황조사에 합의한 사실에 주목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A/65/364)에 주목하고,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엔총회 결의 64/175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포괄적인 북한인권보고서도 주목
-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
- 모든 한국민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관련,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평가하고, 향후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1) 출처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본 문)

1. 아래 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a) 북한 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집단처벌(연좌제),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용

2) 해외에서 송환된 사람들은 물론,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

3)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와 구금,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

⇒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난민최고대표 및 동 사무소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

⇒ 또한,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협약과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

4)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평등한 정보 접근권,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 등을 통해 국가의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5)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의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문제, 여타 고층을 초래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6)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밀입국, 강제낙태, 경제분야 등에서 성차별, 성폭력

7) 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침해, 특히 많은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보고

⇒ 이와 관련, 북한으로 돌아오거나 송환된 아동, 거리의 아동, 장애아동,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아동, 구금시설 내에 살고 있는 아동, 불법적 상황에 처한 아동 등이 겪는 특별히 취약한 상황을 주목

8)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그들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수용소와 강제조치 사용

- 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의 위반
 - (b) 인권이사회 결의(7/15, 10.16, 13/14)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 (c)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수락한 권고사항을 명확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 아울러, 지금까지 결과문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 표명
2.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북한 정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
3. 북한 내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에 국제구호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예방 및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4.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한된 정보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그간 활동해온 것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평가
5.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
 - (a)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조치,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기된 권고사항, 그리고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기구의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상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즉각 중단
 - (b)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부 앞에서 처벌
 - (c) 난민유출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을 다루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며, 그 피해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되었거나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

- (d) 북한 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 등을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전적인 협력 제공
 - (e)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추진한 바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그 사무소와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 (f) 노동자 권리의 의미있는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
 - (g) 유엔 인도적 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
 - (h) 인도적 지원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약속한 대로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북한 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통해 식량접근권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정책을 이행
 - (i) 유엔 국별팀 및 개발기구가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촉진하는 등 국제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와 부합하여 민간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개선
6. 제66차 총회에서 북한인권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제5권 2호 2010

북한인권

국제 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 HUMAN RIGHTS